

2020년 2월



문재인정부 실정 보고서

제 6 권

파괴되는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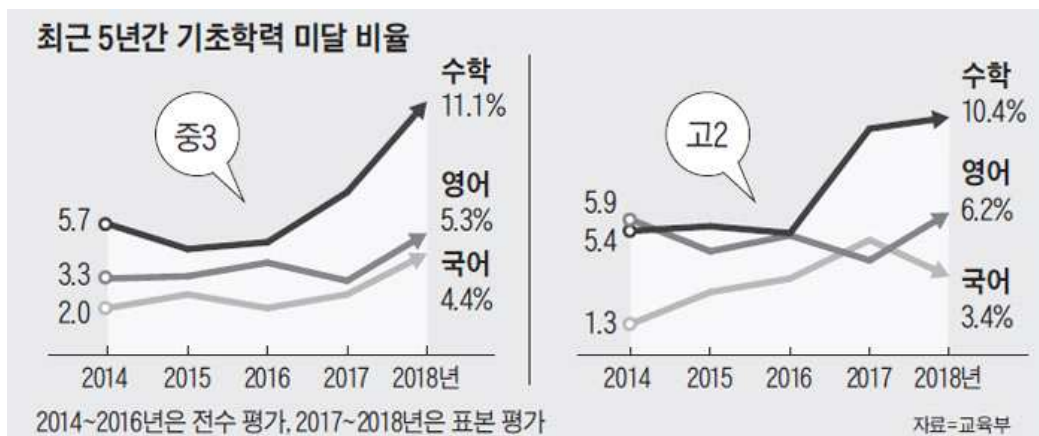
파괴되는 대한민국 교육

국민 혈세 평평 쓰나 학력은 추락하고 사교육비 부담은 대폭 늘어

중·고 학생 기초학력 미달자 지난 정부보다 2배 증가

대한민국 학생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였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읽기, 수학, 과학에서 최 상위권을 차지하여 선진국으로 부러움을 샀다. 미국 오마마 대통령은 한국교육을 미국교육과 비교하여 본받을 국가로 스무 번 가까이 한국교육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진보·좌파 교육감·전교조와 손잡고 ‘경쟁을 줄이고 사열화를 없앤다’를 이유로 ‘덜 가르치는’ 정책으로 학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본수업도 못따라 가는 기초학력 미달자의 급증이다. 2018년 6월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3은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 4.4%, 수학 11.1%, 영어 5.3%이고, 고2는 국어 3.4%, 수학 10.4%, 영어 6.2%로 판명되었다. 수학과목에서는 교과내용의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10%가 넘어서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고등학교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하여 학력저하가 심각한 것이다. 더욱이 전수조사하던 것을 표본 3%로 표집평가로 변경하여 학력저하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수 조사하던 2012년 2.6%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13년 3.4%, 2014년 3.9%, 2015년 3.9%, 2016년 4.1%를 기록했다.



[그림1] 최근 5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조선일보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이 증가한 원인이 자유학년제 등 지식교육경시 정책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집중지도 환경을 만들고 진단도구를 보급하는 정도의 비현실적인 대책을 2019년 3월에 발표하였다. 일선 학교에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학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학생 성적을 평가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에서 이마저 거부하는 반교육적인 행태로 학부모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폭이 지난 정부보다 큰 역대 최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사교육비 대란을 겪고 있다. 2019년 3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1만원으로 전년대비 7.0%, 1.9만원이나 오르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3.6만원(12.8%)나 증가했다. 사교육비를 조사한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포함한 평균치이기에 실제로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크다. 3년 연속 1인당 사교육비 최대치를 갱신 하였 뿐만 아니라 ▲ 사교육 참여율, ▲학교급별 사교육비, ▲과목별 사교육비 등 어느 항목 하나 감소한 것이 없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증감	1.1(+)	0.9(+)	0.2(-)	0	0.4(-)	0.3(+)	0.3(+)	0.2(+)	1.2(+)	1.6(+)	1.9(+)

[표1] 역대 정부의 1인당 사교육비 전년대비 증감표, 자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표 1]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교육비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교육비 증가 요인은 복합적이거나 분명한 것은 학부모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2019학년도 수능, △사립유치원 정책 등에서 혼선을 빚어 불안감을 키운 점을 들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렇다 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부 안 시키는’ 혁신학교 대폭 증가

현 정부는 혁신학교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으로 보고 확대하고 있어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도입하여 진보좌파 교육감들은 신설학교는 무조건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기존 학교는 예산지원을 통해서 꾸준히 늘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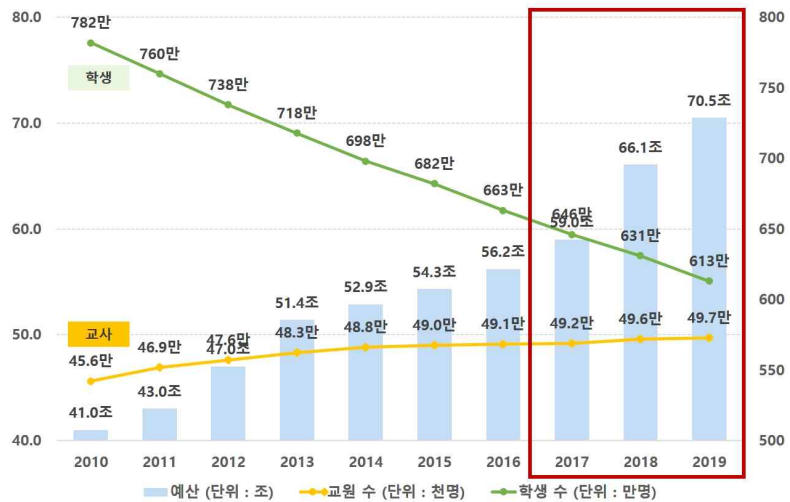
그 결과, 2009년 전국 13곳이던 혁신학교가 10년 만에 1714개로 폭증했다. 전체 초·중·고교의 0.1%에서 10년 만에 10%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초등학교(1026개)가 대다수지만, 중학교(531개)와 고교(157개)도 적지 않다. 학교에 주는 예산은 초기에는 1억이 넘었으나 최근에는 시도별로 다르지만 5천만 원 내외의 별도 지원금을 주고 있다.

입시위주의 획일적에서 탈피하여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 학습능력을 배양한다고 자유로운 수업방식, 동아리 활동 혁신, 학생 자치 활동 강화 등을 강조하다. 학교운영에서는 교장중심에서 교사 중심으로 의사결정 중심이 이동하여 자칭 학교민주화를 추구한다. ‘학교장을 무력화시키고 학교운영권을 장악한 전교조가 이념 교육시키는 정치 학교’라는 비판을 받는다.

문제는 학력저하이다. 토론, 다양한 체험 수업 등을 강조하고 교과 공부는 등한시하면서 진도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한다. 이로 인하여 서울 경우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학업분위기가 산만하여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광상도 국회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기도 하였다

지난 3년 간 학생은 7.5% 줄었는데 유·초·중·고 예산은 25.6% 늘어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으나 교사는 늘고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 재정 낭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6백63만 명에서 2019년 6백13만 명에 이르러 3년 동안 7.5%가 감소하였다. 이래 그림에서 보듯이 시도교육청 예산은 같은 기간 56조3,341억 원에서 2019년 70조 5,960천억 원으로 25.6%가 증가하였다.



출처 : 2019 교육통계연보, 2019 교육비특별회계분석, KEDI

[그림2] 유, 초, 중, 고 학생수, 교원수, 지방교육재정 연도별 추이

교사수도 49만 1천명에서 49만 7천명으로 1.2%가 늘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2020년 시도교육청의 재정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세금을 평평 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교육여건 개선에 그치고 있다. 교원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국가 수준으로 좋아지고 있다. 2019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1.9명, 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10.6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도 유치원 17.0명,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에 불과하다. 1970년 초등학교 62명, 중학교 62명, 고등학교 58명에 이르는 콩나물 교실과 비교하면 똑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1/3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국가의 돈을 공교육에 많이 쓰는 것에 비해서 교육성과는 형편없다.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은 늘어나고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국사태 모면하려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희생양 삼아 폐지

지난해 11월 7일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서열 해소” 한 마디에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2025년에 자사고·외고 폐지를 발표했다. 40년 이상 우리 고교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전국의 자사고(42교), 외고(30교), 국제고(8교)들이 고교황폐화의 적폐세력으로 몰려 일반고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5년 시한부 사망선고를 받은 자사고·외고의 학부모·학생들은 조국 전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서 불거진 사회적 공분을 자사고·외고 ‘죽이기’로 모면하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단계적 폐지방침에서 대통령의 ‘고교서열해소’하라는 한마디에 일괄 폐지로 바뀌어 마치 롤러코스트를 탄 것처럼 어지럽다. 국민 여론수렴 없이 군사작전처럼 밀실에서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하였다.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은 교육에서 선택 자유를 박탈하고 교육을 국가독점사업으로 생각하는 교육독재 발상이다. 자사고·사립외고의 태생과 성장 과정은 국민의 자유와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을 확대해 온 우리 역사 흐름과 닮았다.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획일적인 교육체제가 한계를 드러내자 사립고에 자율을 주어서 돌파구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고교평준화 과정에서 공립교육체제로 흡수된 사립학교를 본래 모습으로 환원시키자고 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토론자는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의 철회를 주장한다.

첫째, 평준화 지역의 학생·학부모가 선택할 고교가 거의 사라져 고교선택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대학 예·체능 이외 학과의 진학을 꿈꾸는 중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고교는 영재·과학고뿐이다. 이들 학교의 정원은 전체 학생의 0.05%에 불과하여 하늘의 별 따기만큼 합격하기 어렵다. 그동안 자사고·외고에 진학하던 4.2%의 학생들은 사는 집 근처에 강제로 배정받는다. ‘배급형’ 교육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역주행이고 역사의 퇴보이다.

둘째, 고교평준화의 획일성과 무(無)경쟁의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다. 자사고·사립외고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다. 기존 평준화에서 나타나는 무경쟁과 무긴장 문화를 보완해온 것이다. 자기 변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42개 자사고와 16개 사립외고가 정부 지원없이 자립으로 운영하여 절약되는 세금을 더 교육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79개의 전환비용이 5년 간 1조에서 1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는 자사고·사립외고 전체 5만명의 40%에서 60%에 이르는 연간 2만 명에서 3만 명 학생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이다.

넷째, 자사고·외고를 없애면 강남 등 부유지역 명문학군에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지역 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소위 ‘학군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을 부추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다섯째,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자사고·외고 등 교육제도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교육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정권 색깔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면 교육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려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야기된다.

여섯 번째, 자사고·외고 등 독립형 사학을 부정하는 것은 국제 규범(Global standard)에 어긋난다. 세계적으로 국가권력이 사립학교의 운영을 통제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일본의 경우 1967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한 학교군제(평준화)에서도 사립학교는 선발권을 유지했다. 평준화는 공립학교만 적용한 것이다.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은 기본권으로 정부가 최대한 보장해준다. 이런 자율을 바탕으로 교육경쟁력을 키워서 전 세계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입시에 과도한 정부 개입과 등록금 규제로 대학경쟁력 추락

서울대 blue ribbon 경영진단 패널로 참여하고 “대학, 갈등과 선택”책으로 우리나라 지성인에게 잘 알려진 하버드대학의 헨리 로조프스키(Henry Rosovsky)교수는 미국이 세계 유명대학의 2/3내지 3/4을 보유한 이유를 명쾌하게 들고 있다. 미국대학들은 훌륭한 교수, 우수한 학생, 많은 연구비와 사회적 관심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로조프스키 교수의 기준에서 보면 한국 대학들은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수 학생선발과 우수한 교수 유치에 필요한 재원조달에서 경쟁의 자유를 정부에서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11년 39위에서 '19년 63개국 중 55위로 추락하였다. 2011년 이후 매년 순위가 밀려서 2011년에 39위, 2013년에 41위, 2017년에 53위, 2019년에 55위로 뒷걸음질 쳤다. 그 원인과 해결방

안을 찾아본다.

대입제도 정치도구화하여 혼란에 빠트려

지난해 11월 28일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조국 전장관의 딸 입시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비율 확대'를 지시한지 40여 일 만에 내놓은 개편방안이다. 현재 중3 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부터 서울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올리고 수시에서는 교과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종합전형(학종)의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되었던 자율 동아리·봉사·수상·독서활동 등이 학생부에 2024학년부터는 기록되지 않고, 자기소개서까지 폐지되어서 학종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2022 대학입시 개편안을 발표한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온 국민의 초미 관심사인 대학입시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개편하여 중2부터 고2까지 대입이 각각 다르게 만들었다. 더욱이 2021년에 새로운 수능체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대입을 보는 2028학년 새로운 대입제도가 도입된다.

현 정부가 대입 개편 결정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 오류를 범했다. 첫째, 국가가 선발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대학의 선발권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대학을 불신하여 오히려 선발 재량권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대입 제도 개편 논의에서 정작 학생선발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대학은 주변부로 밀려났다.

둘째, 대입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정책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결을 도모하여 정치도구화 하였다. 2018년 대입개편에서는 일반 시민의 공론화를 거쳐 정시 비율, 수능 절대평가 등을 결정하다 보니 교육 이슈를 표결에 의한 승패 문제로 변질되었다. 이에 대학 총장들은 대입 개편 공론화는 showing (보여주기)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처럼 2019년 정시확대는 정치난국의 타개 수단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셋째, 대학입시제도를 교육적 담론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접근하여 공정성을 둘러싸고 이해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켰다. 수저계급론이 등장하여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스펙 관리가 유리한 상위층 계층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자기소개서, 자율활동, 수상경력에서 사교육 손을 탄 부자 집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에 비해 좋은 활동실적을 기록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종은 사교육 유발이 크고 상위계층이 유리한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학종(수시) 확대론자들은 수능 정시가 오히려 자사고, 외고 학생들이 선호한다는 조사를 근거로 수능 정시가 상위층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교육감과 전교조 등의 반대로 인하여 정시와 수시 비율이 갈팡질팡한 점이다. 전교조는 “정시확대 결정은 우

리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의 포기선언이다”라고 강하게 대통령의 정시확대 지시를 비판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들도 “정시확대는 학교교육과정 파행”을 가져온다고 전교조에 동조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대학예비고사가 도입된 1968년 이후 50년 이상 국가관리 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대입제도를 해결하면 모든 교육문제가 풀린다는 환상과 정치적 발상으로 역대정부는 잦은 입시제도 변경으로 대표적인 ‘조령모개’ 정책으로 국민의 원성을 샀다. 교육자, 지식인, 정치인, 그리고 시민단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입시제도가 제안되고 채택되어 실시되고, 수정되고, 폐기되고 또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여 변경 폐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정책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규제와 입학금 폐지로 대학 재정의 붕괴

(1) 초등학교보다 못한 대학의 1인당 교육비

OECD 교육통계(Education at a Glance 2019)을 보면 우리대학의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8,385달러(R&D제외)로 초등학교 1만 1000달러의 76%에 불과하고 중고등학교 1인당 공교육비보다 4천 달러(약 480만 원)이 적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초중등학교의 1인당 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치보다 큰 반면에 고등교육 경우는 OECD평균의 76%에 불과하다.

구분	초등~고등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R&D제외)
한국	11,029	12,370	10,486(8,385)
OECD 평균	8,470	9,968	15,556(11,056)

<표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16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출처) OECD

이와 같은 현상은 재정지원 불이익 압박을 통해서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이 도입된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2009년에 8000달러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그 이후 근 10년간 동일한 수준에 멈추었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거침없이 상승하여 2013년에 대학생의 교육비를 추월했다. 그 이후 격차를 더욱더 벌어져, 2016년에 초등학생은 대학생에 비해서 1.3배, 중·고등학교 학생은 대학생보다 1.5배 공교육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쓰고 있다.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교육비지출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대학생에 지출되는 1인당 공교육비가 초

등학생 1.3배가 되는 것과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여타 OECD 국가들과도 그 격차가 매년 확대되어 이제는 무려 3000달러나 뒤처지고 있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은 OECD평균의 64.6%에 불과하고, OECD국가 35개국 중 29위로 밑바당이다. 여타 국가들의 1인당 교육비 투자가 꾸준히 증가한 데 반해 우리의 대학생 교육비 투자는 10년째 동결상태이기 때문이다.

(2) 입학금폐지하고 등록금 규제하면서 대학 혁신 댁달

문재인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으로 ‘반값등록금 추진’, ‘대학 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학금폐지를 지시하였다. 이에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대학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고 대학 재정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입학금을 줄여서 2023년에 완전 폐지하기로 하였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학재정 감소규모는 국.공립대학은 118억원 감소, 사립대학은 2,10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많게는 50억 원, 평균 약 13억원의 수입이 감소한다. 문제는 10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금이 폐지되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있다는 점이다.

학생의 등록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립대학은 2009년 대학 등록금 억제정책과 반 값 등록금 정책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8년 명목등록금(경상가) 수준은 국.공립대학은 5.0% 인하, 사립대학은 2.9% 인하하였다. 이를 소비자물가상승률(2015=100) 반영하여 계산하면 2011년 대비 2018년 실질등록금(불변가) 수준은 국.공립대학은 16.4%을 내렸고, 사립대학은 11.8% 인하하였다. 이에 2018년 평균등록금 수준은 국.공립대학은 2005년, 사립대학은 200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일부 사립대학에서 운영비 적자를 적립금을 털어 쓰고 있어서 2014 이후 5년 연속 감소세이다. 작년 사립대 적립금이 1,800억원 감소했다.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3,000억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쓸 곳은 늘어나는데 주된 수입원인 등록금을 묵고 있어서 대학의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다. 재정 악화로 기계기구매입비, 연구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교육비의 지출이 줄고 있다. 사립대학의 '11년 대비 '17년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규모는 8.5%(1,495억원) 감소하였다. 4차 산업혁

명이 화두인 시대에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고 연구·실습 기자재 확충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표적인 교육여건 지표인 교수 1인 당 학생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9.2명으로 OECD 평균 15명의 2배 수준(2016년 기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16.4명, 중학교가 14명, 고등학교가 13.2명으로 OECD 평균에 가까운 것과 대비가 된다.

(3) 등록금 규제를 풀고 국가장학금을 하나로 통합

등록금 규제와 입학금 폐지는 가격규제이다. 가격규제를 풀어서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올려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물가상승률 2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나 등록금 인상률은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시키고 있어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에서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유지·확충 등이 참여 필수조건이 되고 있어서 등록금 규제 수단으로 정부는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이 자유롭게 등록금을 책정하고 재정확충에 온갖 노력을 다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장학금제도도 1유형과 2유형을 통합하여 운영하여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등록금을 지금처럼 계속 묶어 돌려면 일본처럼 국가에서 대학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기에 우선 대학 스스로 재정을 확충토록 자율성 부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대학입학금을 간섭하는 나라는 대학 미래가 없다. AI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대학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